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두고 입씨름

공청회 열고 검찰개혁법 논의
강경파-일부 의원들 간 입장 팽팽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 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쟁점을 놓고 토론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찰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공수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칙”이라며 “이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첫 번째는 그간 폐단으로 지목돼 왔던 검찰의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 설명을 맡은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쟁점이 되는 공소청법 4조8호를 설명했다. 공소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의 수사는 삭제했으나, 8호에 ‘법령에 따른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노 부단장은 “(검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될 것”이라며 “보완 수사에 대해선 형사법의 다른 조문들과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권한의 남용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

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형사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찬성 측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공소청법 4조8호를 두고 “8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에 따라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순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유지 결정 및 거주지에 필요한 사항, 특사경 지휘 감독, 사법경찰 관리와 협의·지원,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소청법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에 李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

철저한 수사·엄중 처벌 지시
“신뢰 깨지면 경제도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민간인이라는 점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와 관련해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가.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공과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

“제 삶 원칙 지키며 살아와”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피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지남 원내대표와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 당사자들 간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실제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이날 오전 8시57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저

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공천헌금 1억을 직접 받았는지’, ‘돈을 받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금품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등 취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실제 수수 여부와 그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총 10명 규모의 수사지원계를 신설 구성해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등 정치인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쌍특검법 촉구”…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

국힘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6일차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쌍특검법안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상임위 간사 등 수십여명의 의원들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진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 앞에 모여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공천 뇌물 즉각 처벌, 쌍특검법 즉각 실시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최형두·주진우 의원의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쌍특검법을 수용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 아는가.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끝은 사고와 파국”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이와 똑같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당으로서 매우 웅장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단식’, ‘밥 먹고 싸우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6개월 내란 특검을 할 만큼했다. 3대 특검에 500억원

을 쓰면서 수사 인력을 동원하면서 120여명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재탕, 삼탕의 특검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154억원을 들여서 251명을 투입해 최장 170일의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생 수사는 곳곳이 펑크나고 있다.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1만8000건에서 3만7000건으로 폭증했고 강도 살인 사건 등 5대 범죄도 1600건에서 4100건으로 장기 미제가 폭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두고 “김경이 뇌물 주고 한 짓이 무엇인가. 자기 남동생, 여동생 회사 설립해서 연구용역 돈 빼 먹고 부동산 시행사업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다 빼먹었다”며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국민 주머니에서 이를 충당하고 뇌물의 100배, 1000배 달하는 액수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태홍 기자